

12·3 비상계엄 사태 위험 여부 견해 집중 질의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 “국회의원이었다면 국회 담장 넘었을 것” 野 단독개최 “국힘 주장,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與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다. 인사청문특별위는 24일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침 방점은이다. 국회 및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갖고 있는 법원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불참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결국 야당은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험 여부 관련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

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이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민 의원의 질문에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 정계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에 제출한 사전질의답변서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에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분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6인 체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모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해야만 한다. /김진수기자

우원식 “韓,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그 자체로 위법 “권한대행 개시 후 열흘째 지체...납득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회 주변에선 한 권한대행이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란 우

원식이 지적하고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이튿날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및 추천위원 2명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진수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당대표 참여...이후 의제·참석범위 등 조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

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할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

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범위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내년 1월2·3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광양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광양시 등 2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개 품목의 요금정보 비교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 안

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지방 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

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45→52점)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부담 완화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 상위 10%인 ‘가’ 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와 충북도 등 2곳,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곳, 시·군은 광양시 등 16곳이다. /김진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시장은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을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를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안마해상풍력(주)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당사(EQUIS WIND (KOREA) HOLDINGS PTE. LTD.)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일대 해상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 안마해상풍력(주)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삼진일렉스, 이일택, 장수에스엔퍼머, 윤의순, 하경호, 위순일이 보유하고 있는 안마해상풍력(주) 발행 주식(합계 안마해상풍력(주) 발행주식의 총 23.64%)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안마해상풍력(주)가 영위하고 있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대표자	발전사업명	용량(MW)	주소	면적	사업개시 예정일	운영기간
안마해상풍력(주)	미합중국인 조연우 (CHO EON WOO)	영광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	224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군도 시속 5km/일 해상	31.7 km ²	2029년 1월	사업개시 후 25년
안마해상풍력(주)	미합중국인 조연우 (CHO EON WOO)	영광 안마2해상풍력 발전사업	304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군도 시속 5km/일 해상	52.2 km ²	2029년 1월	사업개시 후 25년

2. 의견제출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7일 (15일간)
의견제출방법 : (전화) 02-6241-3981
(e-mail) pms@anmawind.com
(우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5, 다동 1층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방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등골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